

사회복지 주간 동향(24.4.8.~4.12.)

1. 용인시 정책 동향

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

용인특례시,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·성품
기탁과 봉사활동 펼쳐져



※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

- * 용인특례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성품 기탁이 이어짐, 각계 각층에서 전하는 온정의 손길은 소외된 이웃의 마음속 상처와 외로움을 따스한 봄의 햇살처럼 보듬어주고 있음
 - 지난 19일 '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'가 용인특례시청을 방문, '제3주년 의용소방대의 날'을 기념해 회원들은 이웃돕기 행사 수익금과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 200만원을 시에 전달
 - 이날 행사에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과 이민희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, 조량자 여성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함, 지역 내 봉사단체인 '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'는 약 1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으로, 지난해에는 백미 10kg 80포를 기탁하고 자원봉사로 김장 김치를 전달한 바 있음

- 지난 20일에는 처인구 이동읍에 있는 동도사(주지 도원스님)에서 이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 4kg 100포와 화장지 100개 등 총 330만원 상당의 성품 기탁, 동도사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
 - 같은 날 이동읍 소재 (주)마니커에프엔지(대표 최장호)는 삼계탕 960개(570만원 상당)를 이동읍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4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청소 등 봉사활동까지 함께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
 - 처인구 원삼면은 지난 22일 지역 내 기업인 신용건설중기(대표 오광근)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힘
 -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광근 대표는 “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힘쓰겠다”고 말함
 - 처인구 백암면은 지역 내 59개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강보따리 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힘
 - 찾아가는 건강보따리 사업은 먼 관계자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계절에 따른 건강 관리, 응급 상황 대처 방법 등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혈압 측정과 맞춤형 건강 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.
 - 백암면은 위 사업을 실시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도 연계함
 - 기흥구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민간위원장 정경아, 공공위원장 장태석)는 지난 20일 관내 한의원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힘
 - 한방 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실시하고 있는 구갈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,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침, 뜸, 부항, 온열 치료, 추나치료, 한방약 등 맞춤 한방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됨
 - 협의체는 기초수급대상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필요한 한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
 -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민간위원장 김기순)는 지난 16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 이불 세탁을 지원했다고 밝힘
 - 이날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홀로어르신 가구 등 7가구를 방문해 겨울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하여, 세탁을 마친 이불을 다시 해당 가구에 전달
 - 수지구 상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민간위원장 이규성)는 지난 20일 봄을 맞이하여 저소득 어르신 50가구에 건강두유 전달
 -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은 어르신에게 건강두유(약콩 두유)를 손수 전달하며 안부를 살핌
 - 이번 지원은 ‘건강한 계절나기, 면역력플러스’ 사업의 일환으로, 협의체는 영양결핍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계절별 맞춤 식품 제공
- ※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(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, 구갈동/기흥동/백암면/원삼면/이동읍/상현3동 맞춤형복지팀)

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

용인특례시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

< 각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의료지원부터 현장방문까지 공동체사회 위한 봉사 펼쳐 >



※ 상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



※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



※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



※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

- * 용인특례시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침, 공동체 의식과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와 돌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선행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 담은 온기를 전하고 있음
- 지난 달 27일 기흥구 구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업체인 '워시엔조이 구성점'과 취약가구의 이불빨래와 세탁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

- ‘워시엔조이 구성점’ 조영운 대표는 어르신과 장애인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느껴 구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 사업을 직접 제안, 이와 함께 세탁지원과 바우처 제공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함
- 수지구 상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난 달 27일 지역 내 의료기관인 ‘광교웃음진치과’를 지역복지 협력기관으로 인증하고 현판을 전달
 - 상현3동과 ‘광교웃음진치과’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 검진과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. 이어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‘광교웃음진치과’가 예산을 부담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
 - 진익배 광교웃음진치과 원장은 “상현3동 주민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”며 “어려운 이웃을 위한 치과 진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”고 말함
- 처인구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위원장 이옥배)는 지난 달 27일 지역 내 건강관리가 어려운 만성질환자 가정에 혈압기와 구급용품, 파스 등이 포함된 ‘맞춤형 헬스케어 패키지’ 지원사업을 진행했다. 사회복지와 간호 분야 시공직자들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월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을 함
 - 이옥배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“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함
- 기흥구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난 달 27일 지역 내 착한가게로 선정된 곳을 직접 방문해 ‘착한가게 7·8호점 현판’을 전달
 - 착한가게 7호점으로 지정된 ‘달님떡방아’는 매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을 기부하고 있음, 8호점인 ‘서천 365약국’은 하루에 1만원씩 총 1년 동안 365만원을 기부하고,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비타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
 - 권영지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“경기침체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에 동참해 준 착한 가게 대표분들에게 감사하다”고 말함
- 기흥구 상갈동은 지난 달 28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위원장 이춘근)가 초·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구 아동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용인 와이페이카드를 각각 지원
- 처인구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난 달 29일 지역 내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치과 치료와 홍삼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침
 - 지원을 받은 가구는 한부모 모자가정으로,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뇌출혈 수술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임,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‘서울뿌리 치과’와 ‘호림한의원’이 도움을 주기로 함

- 목인석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"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'서울뿌리치과'와 '호림한의원'에 감사하다"며 "지역사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"고 말함
 - 같은날 기흥구 영덕2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국야쿠르트 영통점과 함께 '딩동딩동! 안녕하세요?'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 - 이 사업은 한국야쿠르트의 '프레쉬매니저'가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가구 8 곳을 주 2회 방문해 우유와 국, 반찬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핌, 이 과정에서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나눠 준 식음료가 수거되지 않으면 행정복지 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함
 -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로,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예치금 500만원을 활용해 오는 11월까지 진행
 - 같은날 기흥구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토마토와 참외, 딸기 등 제철과일을 전달하고 안부를 직접 살핌
 - 협의체 위원들은 매 분기별로 지역 내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가구 10곳을 선정해 과일을 전달하고, 안부를 살피는 활동을 펼칠 예정
 - 박명옥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"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"이라며 "과일을 전달받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"고 말함
 - 지난 달 29일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내 홀로 어르신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함
 - 홀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사업인 '행복배달~'을 진행 중인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지역 내 홀로 어르신의 생신 잔치를 열음
 - 오는 11월까지 가족이 멀리 있거나 가족이 없는 홀로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생신을 축하하고 안부를 묻는 현장 복지사업 진행
 - 김기순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"연신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"며 "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함
- ※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(구성동/상현3동/모현읍/서농동/상갈동/역북동/영덕2동/보라동/기흥동 맞춤형복지팀)

2. 중앙정부 정책 동향

1 중앙정부 복지현안

'읍면동 안전협의체'로 지역맞춤형 안전 관리 강화

<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9개 지자체에 안전기능 강화 확대 지원 >

<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으로서의 읍면동 역할 재정립 기대 >



- * 행정안전부는 2024년 '읍면동 스마트 복지·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'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힘
 -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·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(국비 기준, 지방비 50% 매칭 별도)의 사업비를 지원
 -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
 - '읍면동 안전협의체'는 노후화된 도심지,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,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,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
- *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(안)
 - (성격)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,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
 - (구성) 이·통장, 지역자율방재단, 의용소방대, 주민자치회,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
 - (기능)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,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, 쪽방촌·반지하주택 직접 방문,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·건의 등 수행
 - 또한,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·운영과 더불어, 정보통신기술(IoT, AI 등)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도 함께 추진
 -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, 인공지능(AI)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,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

- *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·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지자체로 출발함
 -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(국비 기준, 지방비 50% 매칭 별도)의 사업비를 지원
 -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,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, 시범 지자체 컨설팅(7개 권역) 등을 추진
- * 행정안전부는 ‘읍면동 안전협의체’ 구성·운영 지원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
 -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‘읍면동 안전협의체’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
 - 이와 함께 ‘안전협의체’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,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

※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참조:행정안전부) 참조

2 중앙정부 복지현안

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 선정, 지역사회 치료 역량 강화

< 인천참사랑병원 건물 소방과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비 5억 원 지원 >

*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(월) 국립정신건강센터(서울),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(경기), 인천참사랑병원(인천), 국립부곡병원(부산·경남), 대동병원(대구·경북), 참다남병원(대전·충청), 원광대학교병원(광주·전라), 연강참사랑병원(제주) 이상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힘

-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(입원·통원)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(9개 권역, 30개소)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하였고, 이중 환경개선은 3개소가 신청

·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 및 운영 적합성, 의료 질 개선 노력, 운영계획의 적정성, 추진 의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*하였으며, 기관별 1억 원(전액 국비)을 운영비로 지원

· 다만, 의료진 및 기반시설(인프라)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강원 권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치료보호기관 1곳을 선정할 예정

-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·장비 안정성, 시설·장비 노후도, 사업의 타당성, 사업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천참사랑병원이 최종 선정

· 이번 환경개선금 총 5억 원(전액 국비) 지원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석면 제거공사 추진하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소방·안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

·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

※ 보도자료 참조(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)

2 중앙정부 복지현안

자살생각 유경험률 14.7%...5년 새 3.8% 감소

- *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 「2023 자살실태조사」(「통계법」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) 결과를 발표함
 - 자살실태조사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, 이 조사는 2013년,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'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'와 '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'로 구성

< 2023 자살실태조사 개요 >

- ①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
 - ◆ 조사대상: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2,807명
 - ◆ 조사방법: 방문면접조사-TAPI
 - * TAPI(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): 태블릿PC 기반의 개별면접조사
 - ◆ 조사내용: 자살행동경험, 미디어요인, 정책·자원인식 등
 - ◆ 조사기간: 2023년 8월 25일 ~ 2023년 10월 8일
 - ◆ 연구기관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, 한국리서치
- ②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
 - ◆ 작성대상: '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' 참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30,665명
 - ◆ 작성방법: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 자료 활용(보고통계)
 - ◆ 보고항목: 자살시도 당시 음주여부,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, 자살시도 동기, 시기·방법 등
 - ◆ 작성기준: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

- * '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' 결과에 따르면,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(이하 "자살생각 유경험자"라 함)은 14.7%로 2018년(18.5%)에 비해 3.8%p 감소하였으며, 여성이 16.3%로 남성(13.1%)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 -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'경제적 어려움(44.8%)', '가정생활의 어려움'(42.2%), '정서적 어려움(19.2%)' 순으로 나타났으며,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.1%이며, 전문가*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 7.9%로 2018년(4.8%)에 비해 3.1%p 증가
 -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'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'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.6%, 51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'기분이 우울해졌다', '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'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음
 -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.9%로 높게 나타났으며, 이 중 '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'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.7%로 가장 높았다.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'자살 유가족 지원'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.2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'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'(85.7%), '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'(85.5%) 순으로 응답

- ‘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’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,665명을 분석하였으며, 여성이 64.8%로 남성(35.2%)보다 약 1.8배 많았으며, 연령대는 19~29세 9,008명(29.4%), 18세 이하 4,280명(14.0%), 30~39세 4,251명(13.9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
 - 자살시도 동기는 ▲ ‘정신적인 문제’(33.2%)가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▲ ‘대인관계문제’ (17.0%), ▲ ‘말다툼, 싸움 등 야단맞음’ (7.9%), ▲ ‘경제적 문제’ (6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 자살시도 방법은 ▲ ‘음독’(53.1%) ▲ ‘둔기/예기’ (18.4%), ▲ ‘농약’(5.3%) ▲ ‘가스중독’(5.3%) 순으로 나타남
- ※ 보도자료 참조(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)

3 중앙정부 복지현안

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 복지 강화 추진

< 「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’23~’27) ’24년 시행계획」 및 「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」 논의 >

- * 정부는「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’23~’27) ’24년 시행계획」을 통해 장애인 돌봄·건강·교육·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
 -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,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% 증가한 6조 원이 투입
 -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, 자·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(’24.上)
 - 「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」을 수립(’24.下)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로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
 - 그 외에 ▲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(2,550→9,000명), ▲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.6% 인상(334,810원) 및 부가급여액 인상(8만→9만 원), ▲중위소득 50%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(5만→7만 원), ▲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(19~64세, 월 9.5만 원 → 5~69세, 월 11만 원), ▲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(태아 1인당 100만→120만 원)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
- *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「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」이 확정됨에 따라,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
 -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%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·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·이용
 -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’24.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

- * 정부는 3월 28일(목)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「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」를 개최하여 「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’23~’27) ’24년 시행계획」과 「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」을 심의·발표

<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>

- 위원회 개요 :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(국무총리) 포함 정부·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
- 일시/장소 : '23.3.28.(목) 14:40 /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(9층)
- 참석대상 : 국무총리(위원장) 및 14개 관계부처장, 장애계·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
- 회의안건 : (심의)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'23~'27) '24년 시행계획(안) (보고)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(안)

1.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'23~'27) '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

- *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'23~'27)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·확정
- *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,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
- *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, 최초의 건강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
 - 건전재정 기초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,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% 증가한 6.0조 원이 투입

<복지·서비스>

- 자·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.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:1 지원(340명)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(2,000명)를 제공
- 발달장애인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
-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(15,570원→16,150원) 및 지원대상(11.5만 명→12.4만 명)을 확대하고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3~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
-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,080시간으로 늘리고,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

<건강>

- 올해 하반기,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
-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·운영 시범사업('24.3.1.~)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,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('24.2.28.~),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(중·경증)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

- 공공어린이재활병원·재활의료센터 3개소(5개소→8개소),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1개소(14개소→15개소)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

<보육·교육>

-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('23년말 1,637개소) 62개소를 추가 확충
-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,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%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
-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,550명에서 올해 9,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,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·지정

<소득·일자리>

-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.6% 인상하고(334,810원),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.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
-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(3만→3.2만 명), 민간부문 의무고용률(3.1%)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,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.6%에서 3.8%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 강화
- 중위소득 50%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

<체육·관광·문화예술>

-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'반다비 체육센터'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('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),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(19세~64세 → 5세~69세) 및 지원규모(1인당 월 9만 5천 원 → 월 11만 원) 확대
-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'열린관광지'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 까지 늘림, 장애예술인 개인 창·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

<이동, 안전 등 권익향상>

-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('24년 1,675억 원, 3,765대),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·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('24년 131억 원, 575대)
-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

2.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

※ “장애인 개인예산제”란?

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- *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
- *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(김포, 마포, 세종, 예산)에서 6개월간(6월~11월) 86명 참여,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%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·서비스를 구매하거나(급여유연화 모델), 활동지원 급여의 20% 범위에서 간호(조무)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·이용하도록(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) 함
 -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,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
- *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,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%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, 주류·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·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
 -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(8개) 및 참여자(210명)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

※ 보도자료 참조(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)

4 중앙정부 복지현안

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살수단 관리 강화

- 민·관 협력하여 일산화탄소·농약·교량 집중관리 -

- * 보건복지부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산화탄소, 농약, 교량을 지역별 빈도·특수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13개 광역(시·도) 자살예방센터를 선정하여「2024년 자살수단 차단 사업」을 추진한다고 밝힘

<2024년 자살수단 차단사업 참여 시·도 및 관리 분야>

연번	지역명	관리 분야	연번	지역명	관리 분야
1	서울	일산화탄소	8	울산	일산화탄소
2	인천		9	강원	
3	광주		10	전북	
4	대전		11	세종	일산화탄소, 농약
5	충북		12	대구	일산화탄소, 농약,
6	경남		13	전남	교량
7	제주		※ 그 외 시·도는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중		

- * 본 사업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 수단인 번개탄(일산화탄소 유발 물질) 등을 관리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「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」으로 2018년에 시작
 - 올해부터 지역별 특성이 있는 자살 수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「자살수단 차단 사업」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·도에서는 일산화탄소·농약·교량 중 선택(중복 가능)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
 - 「자살수단 차단 사업」을 통해 번개탄·농약 등 판매업소(슈퍼·점포 등)와 모텔·호텔 등 숙박업소는“생명사랑 실천기관”이 되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, “생명사랑 실천기관”으로 지정되면 슈퍼·점포 등은 판매방식을 개선*하고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숙박객의 자살 징후를 관찰·신고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. 2023년까지 전국에 6,411개의 생명사랑 실천기관이 참여고 있음
 -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량에 안전시설 설치 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(109) 안내를 부착하는 등 교량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

※ 보도자료 참조(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)

5 중앙정부 복지현안

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

- <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, 대상자 기준 확대 >
- <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·접수 가능, 적극적 대상자 발굴로 혜택 확산 >

- *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「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」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힘
 -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(독거,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)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,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
 -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,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
 - 올해부터 택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,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 - 신청은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 가능

붙임 1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

- * 서비스 개요
 - 택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*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·구급 지원
 - (화재 감지) 택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
 - (응급 호출)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
 - (활동량 감지)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, 심박·호흡 등을 측정해,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

<택내 설치 기기>



* 서비스 대상자

- (노인)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
- (장애인)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* 대응 실적

구분	대상자 수(가구)			응급상황 등 조치(건)			
	합계	노인	장애인	합계	응급 호출	화재 발생	활동 미감지
2022년	173,842	164,796	9,046	163,268	17,950	6,265	147,558
2023년	238,806	227,328	11,478	155,373	17,954	6,836	130,583

※ 보도자료 참조(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)

6

중앙정부 복지현안

중앙-지방 사회보장분야 협력 강화 위한 사회보장제도
사전협의 영남권 설명회 개최

< 2024년 4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>

< 영남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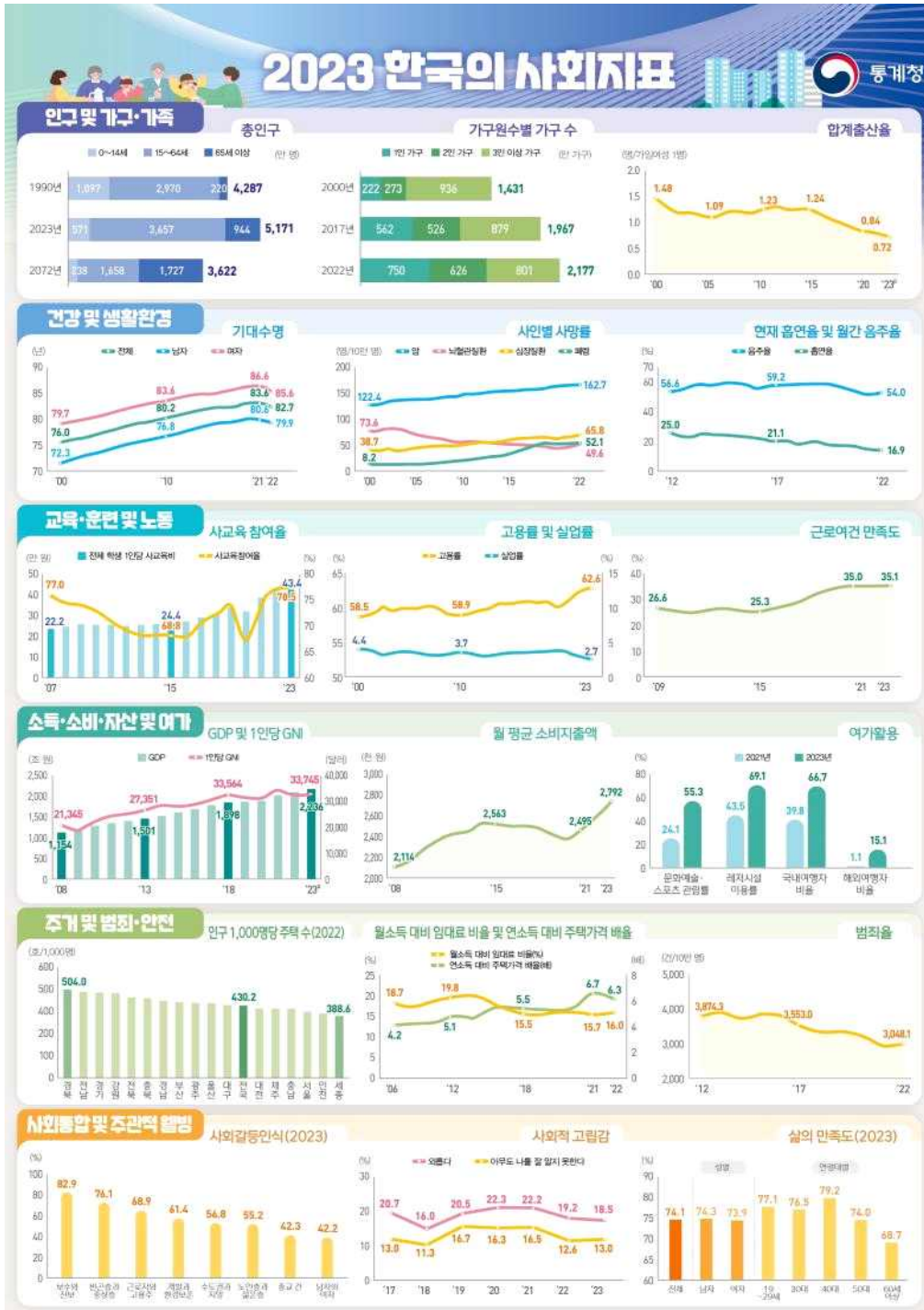
- * 중앙-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,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림
- 보건복지부는 4월 4일(목) 오후 1시 30분에 영남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-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힘
- (설명회 안건) ①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사전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, ②사례로 살펴보는 사회보장제도 협의, ③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Q&A, ④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, ⑤영남권 사회보장제도 현장 협의
-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음, 이번 영남권 설명회는 지난 ▲1월 18일(목) 수도권 ▲2월 5일(월) 충청권 ▲3월 13일(수) 강원권 설명회에 이어 네 번째
- 설명회에서는 먼저 「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운용지침」 개정 사항 설명,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
- 기초지자체에서 신설·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(2억 원)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*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(Fast-Track)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,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
- (신속협의 요건) ▲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·중복 사업이 아닐 것, ▲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, ▲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
- 또한,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,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
- 아울러, 설명회를 통하여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,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 기준 등을 소개, 또한 현장에서 영남 권역 사회보장제도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원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을 지원

※ 보도자료 참조(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)

3. 통계로 보는 복지

1 중앙 통계현안

2023 한국의 사회지표



※ 자료 : 통계청 자료(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)